

기획강좌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고수로부터 듣는다」

“김성훈 상지대학교 총장이 생각하는 한국 농업이 나아갈 길”

일시 : 2008년 9월 11일(목) 14:00~16:30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 희망모을

주최 : 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

후원 : 한국농촌공사

(김성훈 장관 강연 시작)

이 글의 내용은 전부 제 경험과 제 생각을 토대로 쓴 글입니다. 부담 없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WTO 재협상이 있었는데 '제2의 우루과이 협상에 대비하자'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 때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와 함께 소책자를 냈었습니다. 그 소책자에 우리나라 농업살리기의 10가지 염원을 적었는데 '이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참 좋은 세상입니다' 라고 하는 염원을 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다.

이 의견이 아직 유효하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학자, 농촌운동가, 행정가, 순수 농민도 와 있습니다. 비록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달라도 지향은 이와 같이 같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 농민의 상황, 농정의 현주소를 보면 한마디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달이 지날수록 암담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경제수석회의에서 경제부처 장관이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몰라도 이제 농업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고 했고 복지로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석을 여러 각도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복지로 풀겠다는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여론 지도층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나라 농촌 농업의 앞길에 대해서 한가닥 희망마저도 앓아간 느낌이 듭니다.

주식인 쌀까지도 개방하여 학생들이 먹는 김밥은 전부 수입쌀입니다. 일년에 140만 석 이상의 쌀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식량자급율이 27%라고 하는데 사실은 쌀 95%를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미국과 쌀 수출국들이 원하는대로 승자들이 원하는 대로 진

행되었습니다. 그나마 쌀을 제외하고 나면 식량자급율은 정확하게 4.6%밖에 안됩니다. 콩이든 밀이든 옥수수든 국내 자급율은 4.6%밖에 안됩니다. 그나마 보리가 버터 주고 있어서 이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영양실조로 아사직전에 있는 국민들이 2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북한의 식량자급율은 60%대입니다. 북한과 우리의 차이는 부족한 식량 73%를 수입할 수 있는 경제여력을 가지고 있는냐의 여부이며 이에 백성을 굶기느냐 못 굶기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부분은 현재 빗장이 열린 상태, 저항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즘 와서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틈새시장에서 좋은 아이디어, 반짝거리는 마케팅 실력으로 살아난 사람들, 농업 CEO나 장사꾼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들의 역량도 탁월했고 소비자 수요도 읽었겠지만, 그것은 특수한 사례일 뿐입니다.

지금 세계로 눈을 돌려서 보면 애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식량 재고량이 줄어들어 식량 수출 물량이 줄어드고 자원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식량 수출에서도 통제가 가해지고 있어서 지난 2년사이에 국제 곡물 가격이 뛰어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99.8% 수입하고 있는 밀가루는 상급품 밀가루 가격이 상급품 쌀 가격보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2004년 아주 잘못된 협상 결과 쌀마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서 쌀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쌀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안전성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 각종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도 문제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쇠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 8배의 곡물이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4배의 비율이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량이 늘어나서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의 27%가 에너지 생산에 전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브라질과 유럽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기상이변은 이제 만성적으로 되었습니다. 식량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 동포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거나 닭과 돼지, 낙농 젖소들을 길거리에 내다 팔게 되는 그런 사태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안보 차원이나 안전성 차원이 아니라 식량 주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food sovereignty'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국민이 원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주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성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제안해서 OECD가 받아들인 개념이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있으므로 문화와 전통이 유지 계승되고 농업이 있으므로 환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농업을 농민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국민의 문제로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National Minimum Requirement라는 말은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갖춰야할 기본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농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바뀌게 됩니다.

유럽의 알프스 지역을 방문하는데 산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조건과 비슷합니다. 스위스 농민, 이태리 농민의 모습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다시 확인한 것이 농사꾼인 농민들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들도 농업을 National Minimum Requirement로 평가하고 있다. 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더 나서서 농민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에서 프로방스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듣는 것은 해바라기를 많이 심고 있는데 파리의 시민들이 감탄하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프랑스, 자기들의 조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라도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하지만, 스위스도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40도 경사진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젖소를 키우고 케이블카로 치즈덩어리로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림 같은 집이 농촌 곳곳에 지어지고 농촌 곳곳마다 부족이 다르고 축제와 생산물이 다르고 집에서 기른 가공품들, 햄, 같은 것이 다양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지역에 농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지역사회가 강하고 나라가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이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WTO가 인정하는 DIRECT PAYMENT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농민들이 행복한데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EU 가입하고 나서 그리스 농민들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득은 이미 보상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농가 소득도 직접지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WTO가 하지 말라는 것은 100점 짜리로 잘하고 있으면서 WTO가 지원해도 좋다는 것은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상태에서 유럽의 농민과 국내 농민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한 것입니까? 마지막 방어진역이 절대농지인데 이 정부 들어서 대체 농지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기회만 나면 한계농지라고 해서 농업에 잘 안 쓰는 농지를 골프장으로 만들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지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서 상당히 저조하게 하고 있다. 그 이면을 보면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정부의 농경지 소유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비농업인, 비거주인, 투기적인 목적인 토지 소유가 잘 알려지고 있는데 대도시 근교의 땅은 산지이건 농지이건 60~80%가 농민이 소유하고 있지 않고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경지의 40~50%를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 재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새만금 농지는 70%를 비농업 부지로 쓰겠다고 합니다. 정권 한번만 더 바뀌지면 100%로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법관 심사위원의 위원으로 한 적이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땅 값이 오른 것은 이해가 됐는데 대법관이 땅이 많은 것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골프장이 200홀에서 500홀이 생기고 있다. 지금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와 연해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왜 외국에 나가서 실패했는가 보면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어떻게 변했나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것은 없애고 해외 것만 찾는 것이 이상합니다.

농민이 설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개과천선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땅문제입니다. 유기농하려면 최소한도 5년은 땅을 가꿔나가야 합니다. 그쯤해서 돈벌이가 되려고 하면 주인이 땅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유기농하는 사람들의 절반이상이 땅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보면 대외상황 바뀔 때마다 변화를 많이 시도한 사람이 빛이 제일 많습니다. 1농가당 부채가 2,790만원인데 그 중 부채를 많이 진 사람들은 똑똑하신 농민들이고 정부가 육성하신 농업인 후계자들입니다.

산뜻하고 CEO적인 것, 벤처 해서 번쩍하는 것으로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동서고금에 농업에 떼돈 버는 사람은 도둑놈 아니면 없습니다. 녹색 성장의 중요성을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청와대 수석을 만나서 하소연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과 임업의 다원적 기능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논이 대단합니다. 이런 기능을 다해주는 것이 농업입니다. 산림이 그냥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녹색성장 요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농업이 다시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업 인사들 모임에 가서 농업도 국민농업이 되어야 하므로 세계적으로 환경지속가능성이 136등 밖에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그 대안이 산림과 농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2025년에 가면 60세 이상 농민이 90% 이상이 되게 되어 있다. 김민우 성공회대 교수가 쓴 송례문에 대한 글을 농업에 역으로 인용해 봤습니다.

600년동안 이 자리에 서있던 내가 사라지고 나니 내 소중한 가치를 이제야 알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농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줄고 사람이 늙어버리니까 농업이 사라지고 나면 그 때 가서 농업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송례문 신세가 되면 어쩔 것입니까? 미국 국회는 끄떡도 않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FTA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65%의 농산물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쌀이 우리 쌀보다 3.8배인데 땅값만 빼면 1.8배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천혜의 농사가 가격 경쟁력으로는 이기기 힘들다. 그러나 먹는 것은 가격경쟁력만으로 국제 경쟁력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먹는 것은 맛, 향기, 때깔 품질이 중요한 것이 되고 식품의 안전성이 중요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포장하고 마케팅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비용과 가격 면에서는 떨어져도 우선 안전성과 품질과 마케팅 면에서 버티면 된다고 봅니다.

발효과학이 가장 발달해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서양사람은 기껏 우유로 치즈, 버터 정도만 만들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영향학자들이 이상적인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발효식품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농민수는 점점 줄어들고 또한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농업관련 기관이고 교수들입니다. 직접 농민에게 가기 전 단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존재들인데 농업관련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희망을 사고무친의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비농업 경제학자들, 신문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농업에 119조원이 투자되었고 52조원이 투자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40조원이 투자되었다고 하는데 낡은 축음기 판을 틀어서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이 투자된 교육과 국방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CEO 농민들인데 비농업 쪽에서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가지 면에서 존경하고 있는데 혁명적인 농업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역대 혁명적인 농업대책은 두 번 있었는데 광복이후 토지개혁, 그

리고 5.16때 농가 고리채 해소입니다.

한완상 국무총리 시절 정부 때 했던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혁명적인 대책을 지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농가당 부채에 대해서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채를 안고는 안됩니다. 부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합니다. IMF 하에서 160조원을 들여서 쓰러진 기업과 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여할 때는 모럴 해저드라는 말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반도 못 갚았습니다. 농민들에게 3000천만원 중에서 1000만원씩만 감해줘도 건전한 부채를 탕감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된 부분은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5조원이면 됩니다. 농지은행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운용하는 돈을 100배는 높여야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농업 기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농업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정예산을 지방 정부로 넘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구적인 차원에서 가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도 자유로 말갠으면 좋겠습니다. 세계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지자체가 메꿔 나가는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친 세방화(Glocalization)가 되어야 합니다. 장인농업, 명인농업, 명품 농업이 되어야 합니다. 어메니티가 바로 농촌에 있으므로 농촌을 명소화해야 합니다. 농촌의 자연 생태계, 문화유산을 전부 자산화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돈 쓰게 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얼굴있는 생산, 얼굴있는 유통, 책임지는 농업이 되어야 하는데 생산이력제가 다름이 아닌 유통산물에 대한 책임입니다. 명품이 다르게 아니라 농약, 비료 안써도 당도 높은 것이 명품입니다. 자기 이름 붙이고 얼굴있는 농사를 해야 합니다. 엘빈토플러가 다품종 소량 소비시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도 80%가 가족농이고 캐나다가 85%가 가족농입니다. 소농 구조하에서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품명인 명소화 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가족농을 농정의 핵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명품, 명인, 명소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